

이슈브리프 886호
(2026. 8.20)

중일 갈등 전망과 일본의 선택

제886호

김태주 tjkim@inss.re.kr



국문초록

본 보고서는 최근 중일 갈등 현황과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 내재된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중일 관계 전망과 이에 따른 한국의 외교·안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중일 갈등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미중 전략경쟁과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방위력 증대, 인도 등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일 관계의 전면적인 개선보다는 일정 수준의 갈등을 유지, 관리하면서 이를 국내 정치적 리더십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 및 역내 외교·안보 리더십 확대에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대중국 견제와 역내 역할 확대는 동맹국의 안보 역할과 책임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동맹 전략과도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따라서 중일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은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관리하면서 국내 정치 기반을 강화하고, 미일동맹을 활용해 역내 외교·안보 리더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제적 상호의존과 지역적 긴장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제한적인 대화와 관계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한국은 중일 갈등을 단순한 양자 갈등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과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미국의 동맹 재편이 결합된 지역 질서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카이치 정부의 한일협력 강화 의지를 활용해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AI 산업과 공급망 등 한국의 경제·기술적 강점을 외교·안보 전략과 연계해 독자적인 지역협력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중일 갈등과 미중 경쟁의 수동적 영향권에 머무르기보다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주도할 수 있는 독자적 외교·안보 및 경제 비전과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키워드: 중일 갈등, 다카이치 정부, 미중 전략경쟁, 인도-태평양 전략,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동북아 안보질서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로 규정하고, 지속되는 중일 갈등과 관련해 양국 간 의사소통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다만 독선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과 인플레이션, 민생 불안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율 제고를 위해 중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최근 양국 간 갈등의 현황과 관련 움직임에 담긴 의도와 셈법을 분석하고, 향후 중일 갈등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한편, 지역 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일 관계의 현주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관련 발언 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과 수출 통제, 일본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일본 여행 자제 권고 등으로 강하게 대응했다. 일본 역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를 강조하며, 지난 4월 발간한 외교 청서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기존의 핵심적 위치에서 ‘중요한 이웃 국가’로 하향 조정하는 등 대중국 인식과 대응 기조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양국 간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7월 24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양국의 견제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일 갈등 상황 속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고이즈미 방위상의 핵무장 가능성 관련 발언 등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보통 국가화’ 움직임에 대응해 중러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은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성과를 수호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 역시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중일 갈등은 양국 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한편 다카이치는 미일 양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틀로 공유해 온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중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로 규정하고 APEC 정상회의에 기대감을 표명한 최근의 유화적 메시지와는 상반된 행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공개한 NDS(국가방위전략)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기존 접근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면서 대중국 견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카이치는 지난 7월 인도를 방문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해양 진출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대규모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양국은 2조 엔 규모의 투자와 공급망 재편, 희토류 등 5대 핵심 분야 협력,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인도와의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심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결국 인도·태평양 비전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이를 한일 및 한미일 협력과 연계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도에서 일본의 역할과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의도

다카이치 총리는 대내외 정치적 리더십 강화를 위해 중일 갈등을 일정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태평양 비전을 통한 중국 견제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과 함께 자민당 내 취약한 정치적 기반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유약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 리더십의 이미지를 강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전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일 갈등을 강화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라는 안정적인 동맹 구조 속에서 관리한다면 일본 유권자들의 안보 불안을 완화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외교·안보 리더십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카이치는 한국에 대해 총리 취임 이전에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독도의 날 행사에 외무성 고위 관료를 파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취임 이후에는 이러한 주장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 이는 한일 및 한미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국과의 갈등·대립·경쟁을 활용해 여성 총리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정치적 이미지를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구상은 국내적으로 압도적인 중의원 총선 승리와 70%대 지지율 제고에 기여했고,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국제적으로는 전통적인 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역내 안정적인 안보 구도를 구축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리된 갈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중국 견제 요구에 부응하는 일본의 외교·안보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역내 리더십 강화 노력은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활용 전략, 즉 동맹국의 자율성과 역할·책임을 확대하고 안보 비용 분담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노선과도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 전제 등 동아시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보다 자율적인 비전과 행동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집단안보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의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일본의 외교·안보 자율성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거리를 두더라도,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외교·안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이를 동맹의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용인,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역량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 안보 비용과 책임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적 강압 등 역내 현안에 대해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중국을 전제·관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리더십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미일 양국의 지휘통제체계 개편, 연합 군사훈련의 다각화,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확대 등을 통해 상호 의존적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있다.

향후 중일 관계 전망과 시사점

일본의 역내 자율성 추구하고 외교적 리더십 강화라는 전략적 의도를 고려할 때, 중일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라기보다 일본이 일정한 전략적 목적 아래 중국과의 긴장을 활용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유인은 현재도 상당 부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가 중일 갈등을 대외적으로 촉발했던 발언을 내놓은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의 대만 관련 질의는 일본 정치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책, 총리 본인의 인식이 사전에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각 출범 초기부터 다카이치는 관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등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하는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기용했다. 이는 중일 간 긴장 고조와 보수 결집으로 국내외 정치에서 리더십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다카이치의 정치적 이해와도 일치한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의 압승은 다카이치의 대중국 강경 기조와 단호한 이미지가 보수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지지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으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는 중일 갈등을 활용해 장기 집권을 위한 국내 보수 정치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의 동아시아 안보 리더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때 활용했던 ‘정경분리’ 원칙이나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방중과 같은 적극적인 관계 개선 움직임은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패권 질서 속에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일 협력과 파트너십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면서도, 이러한 수직적 안보 구조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과 미군 점령, 평화헌법 등에서 비롯된 제약을 극복하고 일본의 국가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 정치에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안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다카이치의 의도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와 방위력 강화를

적극 수용하는 대신, 이른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방식으로 역내 전략적 자율성과 외교적 리더십을 확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즉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자산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속되는 중일 갈등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현 국면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일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이러한 협력적 분위기는 역사·정치·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도 상호 타협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보다 전향적인 외교·안보 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 안보 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한반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역내 현상을 유지하거나 돌발적 안보 이슈에 대응하는 수준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질서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광범위한 전략 공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일본의 독자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미일 양국이 상호 이익을 얻는 구도를 구축하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지금보다 더욱 분명한 독자적 글로벌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은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AI 산업과 공급망을 핵심 축으로 하는 ‘AI 경제’의 도약과 성장, 그리고 이를 외교·안보 전략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AI 경제 협력체를 구축하고, 경제·기술·안보를 포괄하는 새로운 지역 협력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적·글로벌 비전을 담은 미래 경제·외교·안보 전략이 한미일 협력 강화와 역내 질서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동맹 자율성 확대’ 전략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서도 미국이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배경과 의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관심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 이후에 보다 자율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동맹관계, 즉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한미관계로 재구축하는 데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전방위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호 신뢰의 확대·심화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동적인 작전권 전환조건 충족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능동적 진화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글로벌리더십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중일 갈등은 단순히 중국과 일본 사이의 양자 갈등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미중 전략경쟁,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전략적 자율성 확대, 미국의 동맹 재편, 한미일 협력 강화가 서로 맞물려 있는 복합적인 지역 질서 재편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중일 갈등의 향방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지역 질서 속에서 한국의 국익과 전략적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독자적인 비전과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